

자유안정성을 위한 기본소득 실험: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위한 도전*

최영준**

윤성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개인들의 행복 수준은 낮고 불안정 수준은 높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노동시장의 이중화와 안정을 향한 치열한 경쟁과 이로 인해 파생된 다양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치구조나 경제구조 변화로부터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출발한 해법의 가능성을 제안한다. 즉, 개인의 불안정성과 이로 인한 개인의 실질적 자유의 부재를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진단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 방향의 원칙으로 자유안정성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고용이나 가족 등 기존 안정의 도구들이 그 효과성을 잃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안정을 제공하는 새로운 주체가 국가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국가로부터의 조건 없는 안정부여는 삶의 주체성과 실질적 자유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어서 실질적 자유를 제공할 수 있는 기존의 대안들과 새로운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기본소득이 왜 새로운 대안으로서 유효한지 그리고 어떻게 현실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해 청년 기본소득 실험을 제안하였다. 청년에게 자유안정성을 제공하면서 청년의 행복과 복지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경제적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안정, 자유, 자유안정성, 기본소득, 정책실험

* 이 논문은 LAB2050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연구이다. 또한,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16S1A3A2923475).

** 영국 바스대학교에서 사회정책학 박사를 2006년에 취득하고, 현재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사회정책, 비교정책론, 그리고 불확실성과 정책결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사회정책과 노동시장, 국민연금, 불확실성과 정책, 사회투자 등을 주제로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sspyjc@yonsei.ac.kr).

***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학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불안정노동, 숙련, 혁신 등이 있다(sineside@yonsei.ac.kr).

1. 서론

한국 사회는 치열한 경쟁의 사회, 행복하지 않은 사회, 그리고 서로에게 관용이 부족한 사회로 고착되고 있다. 과거 치열한 경쟁과 삶의 불안정성이 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Dewey(1991)가 논의하듯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안정을 초래한 조건들은 더 이상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세계화와 탈산업화, 인구구조의 변동, 그리고 디지털 경제의 도래 등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가 축소되고 동시에 양극화되는 사회경제체제는 사회적 이동성의 저하와 불안정을 구조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에 구조적인 불안정 및 이를 생산하는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하여 정책적 대안들이 제시되어 오고 있다. 재벌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구조의 개선이나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방식의 정치제도 개선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의미 있는 대안들이지만, 구조개혁을 통해 개인의 삶을 중극에 변화시킨다는 하향식(top-down) 접근을 취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위기'에 대해서 체계적 진단을 하면서, 왜 기존의 접근법만으로 충분하지 않은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대안적으로 위기의 해법을 개인의 삶을 안정시키고, 자율성을 높여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찾고자 한다. 개인에게 자유와 안정성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기존 접근방식과는 다른 상향식(bottom-up) 접근을 취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자유안정성 개념을 도입하여(구교준 외, 2018a; 최영준, 2018), 어떻게 자유안정성이 한국 사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원리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에서 자유는 경제적 자유주의나 반공적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이념으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증가하는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은 부동산, 장시간 노동 혹은 안정된 가족에 의지하여서만 얻게 되는 결과로 인식이 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유안정성을 구현하고 보장하는 도구이자 새로운 분배체계로서 기본소득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고용과 가족에 의해서가 아닌 국가에 의해서 개인에게 자유와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유와 안정을 보장하는 도구로서 기본소득은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온 바 있다(Fitzpatrick, 1999).

하지만, 보편성, 충분성, 무조건성을 충족하는 기본소득의 완전한 실현은 현실적으로 많은 장벽이 존재한다. 이에 기본소득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고 어떠한 과정적 이슈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청년 기본소득 실험을 제안하게 될 것이다. 잠재적 생산성이 가장 높지만, 행복과 복지 차원에서 매우 취약한 집단 중 하나인 청년들

에게 기본소득을 제공 실험을 통해서 자유안정성이 어떻게 현 위기를 돌파하는 중추(kingpin)가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II. 대한민국 문제의 길목에서¹⁾

대한민국은 지난 30년 동안 많은 것을 이룩하였다. 촛불집회를 통한 평화로운 정권교체에서 보여주듯 정치적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확립하였고, 1인당 GDP는 1988년 5천달러에서 2018년 3만달러를 달성하는 등 경제 역시 끊임없이 성장하였다(World Bank, 2019). 30년 전에 복지국가는 낯선 단어였다면, 현재 한국은 취학 전 아동들에게는 아동수당과 무상보육을,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과 장기요양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등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졌다. 문화생활의 향상 역시 눈에 띈다. 해외여행 한번이 어려웠던 나라에서 출국자 수가 2천만명이 넘는 국가로 변화하였고²⁾, K-pop, 드라마 등 문화상품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으로 발돋움하였다. 30년 전 우리나라와는 너무도 멀리만 보였던 일본이 이제 여러 지표에서 유사한 수준이 되었고, 가구 중위소득의 경우 일본을 앞지르기도 하였다(OECD, 2016).

중요한 질문은, 과거 30년간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한 방식들이 현재와 미래의 발전에도 유효할 것이냐이다. 21세기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공통적인 문제에 당면해 있다. 저출산과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고령화, 자동화로 인한 고용 감소, 노동시장의 양극화, 사회적 이동성 저하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그러나 같은 문제일지라도,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문제의 강도와 심각성이 더욱 크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이에 더하여 우리는 낮은 사회적 신뢰,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이 흔들릴 경우 직면할 수 있는 장기적인 경제침체의 가능성, 높은 영세자영업자 비중과 이들의 낮은 생존능력, 일가족양립이 어려운 노동시장과 이로 인한 젠더 불평등,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는 지위경쟁과 이를 위한 사교육 투자 등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시민들은 행복하지 않다. 여러 국제 행복 지표들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OECD Better Life Index 2017에 따르면 한국의 삶의 만족도는 35개국 중 28등이다(OECD, 2017b). 이외에도 출산율이나 자살률 등 행복이나 삶의 질에 대한 여러 지표에서 한국은 OECD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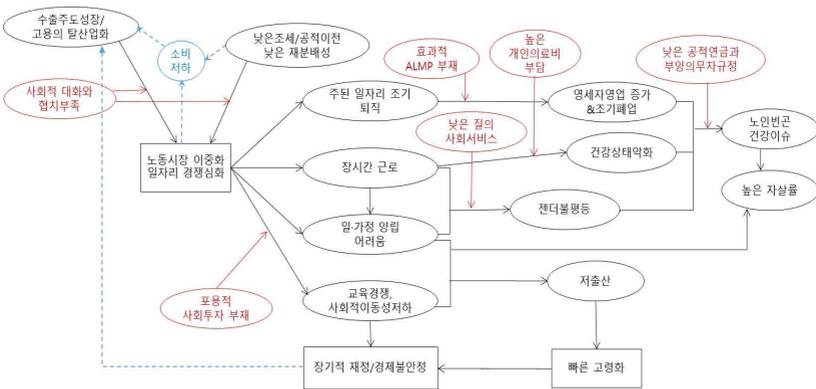
1) 본 장은 최영준, 윤성열(2017)의 발표문을 기반으로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2)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55 (e-나라지표, 한 개인이 여러 번 출국할 경우 중복으로 계산함, 2019년 3월 24일 접속)

즉,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이룩한 정치경제적 성과들이 개인의 안정과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문제들은 경제적 생산성의 저하나 사회적 재생산의 문제로 표출되어, 미래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심화시키며, 미래에 새로운 발전과 변형을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그리고 위에서 나열한 문제점들은 일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이며 역사적 성격을 가진다.

현재의 문제점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그림 1>을 통해 살펴보자.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로서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해왔다. 수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대기업과 이와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중소기업 그리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서비스 산업 간의 생산성 및 임금 차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이러한 경제구조 아래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심화되었다. 또한 안정적인 내부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면서 일자리 경쟁이 가속화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증가나 저임금일자리 비중이 높은 것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대기업 노동자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월등히 낮다(노민선, 2018).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화 현상은 안정된 일자리에 대한 경쟁을 심화시키며, 복지제도를 통한 공적이전이 낮은 상황에서 개인은 생계를 위해 노동시장에 종속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림 1> 한국의 경제-고용-복지의 메커니즘



(자료: 최영준, 윤성열 2017)

<표 1> 기업 규모별 평균임금 국제 비교 (500인 이상 대비)
(단위: PPP 기준 US \$, %)

구분	한국(2017)		미국(2015)		일본(2017)		프랑스(2015)	
	평균임금	비중	평균임금	비중	평균임금	비중	평균임금	비중
1~4인	1,990	32.6	3,731	78.8	2,697	65.7	3,083	58.8
5~9인	2,945	48.3	3,071	64.8	3,166	77.1	3,321	63.4
10~99인	3,490	57.2	3,450	72.8	3,438	83.8	3,625	69.2
100~499인	4,267	70.0	4,029	85.1	3,605	87.8	4,164	79.5
500인 이상	6,097	100.0	4,736	100.0	4,104	100.0	5,238	100.0
전체	3,302	54.2	4,200	88.7	3,616	88.1	3,811	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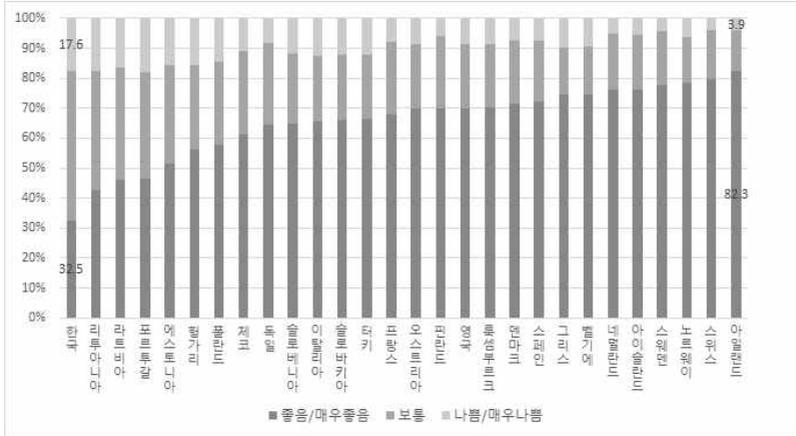
자료: 노민선 (2018)

이러한 노동시장에 대한 이중화와 일자리 경쟁은 다음의 네 가지 문제점을 파생시킨다. 첫째, 숙련이 높으면서도 노동비용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젊은층을 기업들이 선호하면서 ‘주된 일자리’, 즉 자신의 숙련을 사용하는 일자리에서의 퇴직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2018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추가조사에 따르면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49.1세로 나타난다(통계청, 2018). 조기퇴직 이후 다른 일자리로 이동을 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영세자영업의 길로 접어들기도 한다. 하지만, 영세자영업의 대부분은 음식숙박업에 종사하고, 이들의 경우 3년 생존율이 30% 정도에 불과하다(최영준, 이승준, 2015). 반복된 자영업의 실패나 실업 기간의 증가는 노인 빈곤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 동시에 낮은 공적연금 수준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규정도 노인빈곤에 기여하는 요소이다.

둘째, 경쟁적 노동시장은 오랜 근로시간과 연관된다.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최근의 일은 아니다.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여전히 한국의 근로시간은 2017년 연간 2,024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이는 독일보다 한국 국민이 연간 668시간을 더 일하는 것이며, OECD 평균보다도 약 28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다(OECD, 2019). 장시간 근로와 스트레스는 건강 악화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Sparks et al, 1997; Bannai, Tamakoshi, 2014). 실제로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인지 건강 수준은 OECD 국가 중 제일 좋지 않다. 매우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이 17.6%로 가장 높고, 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이들은 32.5%로 나타난다. 아이슬란드에서 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비중이 82.3%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격차가 매우 크다(OECD, 2019). 이는 한국의 고령화가 아직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고려할 때 상당히 심각한 수치이다. 성인기의 건강상태 악화는 건강하지 못한 노년으로 이어지며, 노인의 건강문제는 노인 빈곤과 함께 노인의 높은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김수현, 최연희, 2007; Conwell et al, 2010).

〈그림 2〉 OECD 국가의 인지된 건강상태 수준 2015년(OECD, 2019)



셋째, 노동시장 경쟁심화와 장시간 근로는 일가족양립을 어렵게 한다. 무상보육을 제공해도 근로시간이 일반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시간보다 길고, 휴가제도 등을 제공해도 경제적 근로환경 때문에 육아 관련 휴가를 떠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중은 여전히 13.0%에 불과하다³⁾. 이러한 환경에서 여성은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고, 경력단절 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돌아와도 낮은 급여를 받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가 높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30%를 상회하는 성별 임금 격차를 보이고 있다(OECD, 2019). 여성의 낮은 노동시장 참가와 참가를 해도 비정규직 등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스스로 실업이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게 되고 이 역시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친다(Ginn, Arber, 1997; Frericks, Maier, 2007; 이다미,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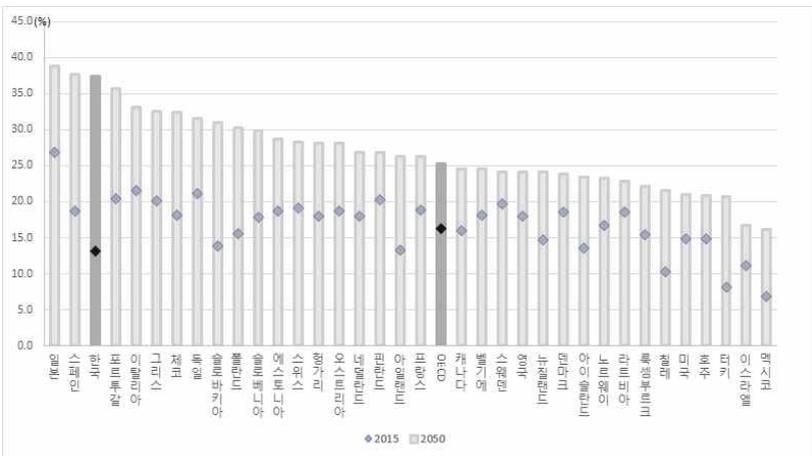
넷째, 점차 줄어드는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지위경쟁(positional competition)이 심화된다. 특히 이러한 지위경쟁에 소득불평등이 반영된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초중고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소득 200만원 이하 가구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9.9만원,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3)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통계현황 2018.12월, <https://www.keis.or.kr/user/bbs/main/302/2117/bbsDataView/42123.do?page=1&column=&search=&searchSDate=&searchEDate=&bbsDataCategory=>, (2019년 4월 7일 인출)

는 50.5만원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9). 최근에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나 자율형사립고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가정배경,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김희삼, 2015). 다시 말해서 한국사회의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이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높은 사교육비와 낮은 사회적 이동성은 앞선 일가족양립의 어려움과 겹치면서 저출산 현상을 지속하게 만든다. 동시에 높은 노인빈곤과 교육경쟁, 고용경쟁은 높은 자살률의 중요한 배경이 된다. 그러나 교육이나 사회적 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포용적 사회투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은 빠른 고령화로 이어진다. 그림 3과 같이 한국은 2015년 고령화율이 13.1%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2050년에는 37%로 일본, 스페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OECD, 2017a). 또한 그 상승 폭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높은 고령화율은 한편으로 더 높은 노인의 사회적 위험을 예고하지만, 동시에 장기적으로 재정불안정과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낮은 복지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더 이상 복지를 증가시키면 재정건전성에 위협을 받는 모순적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림 3〉 2015년과 2050년의 고령화율 비교 (OECD, 2017a)



빠른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의 저하로 이어지며, 소비를 통한 내생적 발전을 어렵게 한다. 이 경우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산업은 지속되며, 현 노동시장의 구조 역시 변화시키기 어렵다. 문제의 시발이 되었던 노동시장 이중화와 일자리 경쟁 심화는 현

재의 낮은 조세 수준과 공적이전(public transfer)에도 영향을 받는다. 한국은 조세와 공적이전이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재분배성 역시 가장 낮은 수준이다(Isabelle, Pisu, and Bloch, 2012). 결과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국가가 개인을 지원하기 때문에, 즉 국가가 노동시장으로 인한 분배의 문제를 교정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노후소득보장이나 건강 혹은 교육 등에 사회적 위험을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이들에게 소비여력이 증가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내의 소비여력의 약화는 다시 수출주도성장애 대한 의존을 높인다. 수출을 주도하는 제조업은 점차 자동화가 되면서 생산성은 높아지지만 고용의 비중은 낮아지고, 점차 낮은 생산성을 가진 서비스 영역과 중소기업에 더 많은 이들이 고용되는 현상은 노동시장의 이중화와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한다. 결국 개인들은 다시 '각자도생'으로 회귀하고 다시 안정을 찾기 위한 경쟁에 치열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행복하지 않은 사회와 아이를 낳는 것이 두려운 사회는 이렇게 완성된다.

Ⅲ. 대안을 구성하는 원리: 자유안정성

1. 개인 기반 원리의 필요성

이러한 사회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력한 경제적 대안들은 크게 경제적 자유주의에 의거한 탈규제 및 노동시장 유연화 논의와 대기업-수출주도성장 체제의 개혁 방안(장하성, 2014)이 있다. 또한, 정치적 대안으로는 비례대표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된다면 사회구조의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최태욱, 2011). 기존의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생략할 것이다. 이들은 정치구조나 경제구조를 변화시켜 개인에게 당면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경직된 사회경제제도에 대한 질문이나 대기업 중심의 왜곡된 경제체제에 대한 변화, 그리고 변화를 추동하지 못하는 정치체제의 개혁은 모두 유의미한 문제제기이다. 이러한 접근이 가지는 유용성을 인정하지만, 거시적 구조의 변화가 개인의 안정과 행복에 연결되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존재하고 추가적 정책들이 실행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거시적 대안 모델과 함께 보다 직접적으로 개인의 삶부터 시작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새로운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개인의 행복에 직접

적인 영향을 주는 방식이나 개인의 안정과 행복을 통해서 사회의 변화를 도모하는 사회디자인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앞서 제기한 많은 문제들이 개인에 기반하고 있으며, 개인들의 문제가 집합적인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안정성을 개인에게 주는 것은 개인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양극화를 줄임으로 악순환을 개선하는 시작이 될 수 있다. 안정성은 이어서 개인에게 자유를 증진시키고 행복과 창의를 높여줄 수 있으며, 경제적 재생산과 사회적 재생산의 문제에 기여할 수 있다(최영준, 구교준, 윤성열, 2018). 예를 들어, 혁신과 같은 경제적 재생산의 이슈나 출생과 같은 사회적 재생산의 이슈를 구조개선을 통한 적하효과만이 아닌 분수효과(Fountain effect)와 같이 밑으로부터 볼 필요가 있다. 즉, 개인에게 안정을 주어 위험회피 성향을 감소시켜 창업이나 사회혁신과 같은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한다거나(Filippetti, Guy, 2015; Hombert et al, 2014), 안정성을 기반으로 관계나 사회적 재생산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하는 방식이다(Akçomak, I. S., Ter Weel, 2009; Kääriäinen, J., & Lehtonen, H, 2006; Rothstein, 2010). 본 연구에서는 생애에 걸친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보다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에게 직접적인 자유와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문제의 사슬을 풀어보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최영준(2018)은 한국 사회에서 가부장적 자유주의가 지속적으로 불안정성을 생산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자유주의를 제시한 바 있다. 국가 주도의 개발주의 시대와 시장주도의 신자유주의 시기를 거치면서 개발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오히려 서로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며 가부장적 자유주의를 형성하였다. 신자유주의와 개발주의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진다. 경제/성장 우선주의가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낮은 탈상품화 수준과 고용이 곧 복지라는 인식을 공유한다. 또한, 재정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국가가 개인에 대해 가부장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공통점이다. 가부장적 태도는 후견주의적 관계에 의해서 혹은 성과주의를 높이기 위한 감시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가부장주의는 '아버지처럼 행동하고' 혹은 '(타인을) 아이들처럼 다루는' 듯한 상태를 지칭하며(Warnecke and DeRuyter, 2009), 위계적 사회 속에서 개인의 자율성이 구속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사회적 자유주의 내에서 국가의 역할은 매우 다르다. 개인의 자유와 안정을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기업과 가족에 의한 보호가 아닌 국가가 직접적으로 보호를 제공하되 가능한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거나 조건을 붙여 보호를 하는 방식을 지양한다. 그런 차원에서 자유를 구속하는 가부장적 국가와 다르다. 개인의 자유를 궁극적 목표 지향점으로 하되 국가에 의해 주어지는 안정을 통해서 목표

가 더 잘 달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과 해방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의 본 의미를 회복시키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을 사회적 자유주의의 핵심으로 제시하였다.

2. 자유안정성과 유연안정성⁴⁾

최영준(2018)은 사회적 자유주의를 구현할 현실모델과 사회경제 시스템으로 '자유안정성 모델'을 제시하였다. 자유안정성 모델의 원형적 모델은 북유럽국가들에서 시도된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이다. 이 모델은 네덜란드와 북유럽 국가들에서 20세기 후반부터 발전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보다 광범위하게 유럽연합에서 받아들여진 형태이기도 하다. 이 개념은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ecurity)을 결합하여 만든 개념이다(Wilthagen, 1998). 유연안정성 모델은 유연성을 제공해주는 고용시스템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복지시스템, 그리고 고용 가능성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Bredgaard and Madsen, 2018). 고용시스템은 기존의 경직적인 체제에서 벗어나 고용주와 노동자 개인에게 노동에 대한 더 많은 선택의 자유를 주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있다. 유연성은 노동자 개인에게 일과 삶의 양립을 위한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많은 불안정성과 고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 불안해진 개인이 불안정에 빠지거나 자신의 숙련이나 기술을 희생하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국가는 관대한 소득보장제도와 함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정책은 유연안정성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퍼즐이다. 안정된 개인들이 노동시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일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시스템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제공한다. 고용 가능성을 높이면서 낮은 직업 안정성을 보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식기반경제에서 유연한 경제 및 생산체제를 만들 수 있게 하며, 동시에 안정성 부여를 통해서 자발적인 직업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연안정성은 개인에게는 안정을 허락하고, 고용주에게는 효율성을, 그리고 국가에게는 경쟁력을 증가시키는 방식이 되는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성의 증가가 불안정성을 가져온다는 기존의 상식은 유연안정성 모델이 일부 불식시킨 것은 사실이다.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은 유연안정성 모델이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Muffels and Wilthagen,

4) 본 장은 최영준(2018)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2013). 최근에는 대륙유럽 국가들에서도 이 모델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다. 미래 사회경제체제를 준비하고 있는 독일 정부는 ‘노동 4.0(Arbeit 4.0)’ 문서를 통해 더욱 유연해질 미래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을 언급하며 이와 상보적인 체제로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연안정성을 실현하고 있는 국가들의 중요한 특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분적 논의나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비정규직이 실제 불안정으로 직결될 뿐 아니라 개인의 존엄성까지 침해받는 우리의 현실과 달리 유연안정성을 실현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매우 높은 시간제와 한시고용 비중의 불안정과 존엄성 침해의 문제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보편적이고 두터운 사회보장을 통해 유연성이 개인의 삶을 잠식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경제체제에 보다 적합했다고 판단되었던 유연안정성 모델도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다음의 비판점들이 핵심적으로 제기되었다. 첫째,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개인의 노동을 자유롭고 유연하게 하기보다는 고용주에게만 더 많은 선택을 주는 방식으로만 전개가 되었다는 점이다. 전병유(2016)가 지적한 바와 같이 유연성은 고용주에게 선택을 증가시키는 것과 함께 개인의 노동에 있어서도 자유로운 선택이 증가되는 방식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업의 효율성 관점에서만 관철이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유연성의 증가에 비해서 안정성이 과연 증가했는가에 대한 비판점이다. 특히 2007년 경제위기 이후 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한 유연성과 불안정성이 증가한 것에 비해서 이를 상쇄할 안정성의 도구는 그다지 발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안정성이 줄어드는 모습도 발견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안정성을 강화시키는 장치가 없는 현실에서 유연안정성 모델은 실제 노동의 유연성 모델 강화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Viebrock and Clasen, 2009). 실업급여의 안정성이나 관대성이 삭감되고 구직을 촉진하기 위한 강제적 요소(sanction)들이 실업급여나 근로연계복지(workfare programme)에 강화된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유연한 노동에 노출되었지만,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면서 근로빈곤이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된 것도 연관된 비판점이다. 마지막으로, 유연안정성 모델이 젠더불평등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고착했다는 점이다. 새롭게 증가한 유연한 일자리가 여성에게 편중되고, 남성은 전일제 정규직에 머물러 있는 경향성이 발견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연안정성 모델은 유급노동에 초점을 맞추며 돌봄노동 등과 같은 무급노동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미래의 다양한 고용과 일이 물론 유연안정성의 실패가 모두에게 전일제 평생고용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의 회귀가 되기는 지식기반경제에서 더욱 가능한 옵션이 아니다.

이제 구교준 외(2018a)와 최영준(2018)은 유럽의 유연안정성 모델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자유안정성 모델을 제안하였다. 자유안정성이란 노동시장의 유연성 대신 개인의 실질적 자유(freedom)와 기존의 안정성(security)을 혼합한 개념(freecurity)이다. Bauman이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유와 안정은 개념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이다(인디고연구소, 2014). 유연안정성 모델에서 유연과 안정이라는 두 개념은 상쇄관계에 있지만, 자유와 안정은 서로를 완성해주는 상보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Bauman은 자유가 없는 안정은 노예와 같은 상태이며, 안정이 없는 자유는 완전한 혼돈상태라고 하면서, 두 개념이 필요충분조건임을 밝히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연안정성 모델은 유급노동에 초점을 맞추면서 유연성에 있어서 경제적 효율성 관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자유안정성 모델은 개인의 실질적 자유에 초점을 둔다. 여기에서 자유는 기존의 경제적 자유주의를 넘고 정치적 자유 역시 넘어서나. 유급노동을 넘어 돌봄과 같은 무급노동을 포함하여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일을 선택하고 더 나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을 선택하는 자유까지를 포괄한다. 즉, 자신의 관심(interest)과 열정(passion)을 쫓아서 의미 있는 일을 하거나 추구하는 과정을 자유라고 지칭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일은 한나 아렌트가 제시한 일이나 정치 그리고 사회활동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나카마사 마사키, 2017). 이항우(2015)가 논의한 바와 같이 디지털 경제에서 일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고, '생산적인 일'이라는 의미 역시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 유급노동과 다양한 활동과 일의 구분이 흐려지게 되면, 현재의 사회경제체제 역시 변화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20세기 산업시대 때 남성부양자를 부양하기 위한 모델로 시작되었던 복지정책들은 더 많은 개인들이 자신의 일과 활동을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이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체계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질적 자유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는 개인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줄이는 새로운 안정의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한다. 자유안정성은 이러한 두 개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3. 누가 안정을 제공해줄 것인가

한국의 자유안정성 수준은 높지 않다. 구체적인 실증 결과는 최근 한국의 자유안정성 수준을 조사한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바 있다(최영준 외, 2019a)⁵⁾. 안정은 “귀하의 현재의 삶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입니까?”라고 물었으며, 자유는 “귀하는 전

5) LAB2050 민간연구소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2018년 10월에 만 19세부터 69세까지 104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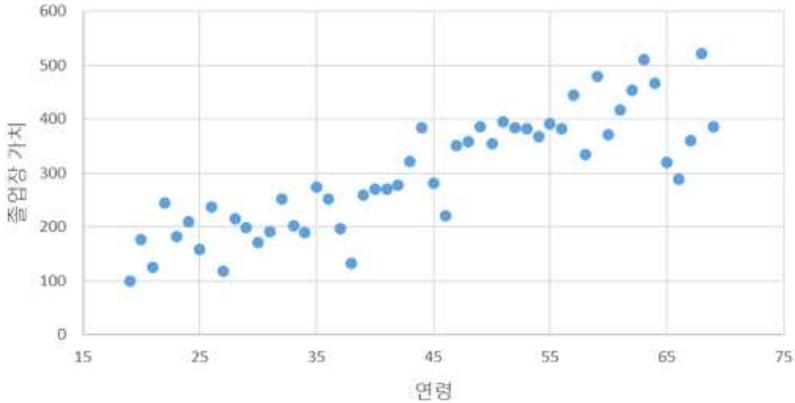
반적으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본 질문에 대해서 둘 다 긍정적으로 답변한 이들은 약 53%였다. 이에 비해서 둘 다 없다고 응답한 이들은 약 17%이며, 자유만 있다고 응답한 이들이 27%, 안정만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약 3%였다. 시민으로서의 기본이 되는 자유와 안정을 누리는 이들이 50% 수준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행복의 핵심이자 한국 사회 문제의 출발인 자유와 안정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Ryan, R. M., & Deci, E. L. 2001; Anderson, C. J., & Hecht, J. D. 2015). 하지만, 자유를 증진하는 것은 안정을 제공하는 것에 비해 공공의 개입에 한계가 있다. 반면에 안정은 자유를 누리는 기반이 될 수 있고, 공적 개입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서는 안정에 초점을 두어 논의하고자 한다.

20세기 한국사회에서 안정을 주는 수단은 가족, 교육, 그리고 고용이었다. 하지만, 이 세 기제 모두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모두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미 주지된 바와 같이 가족은 개인의 사회적 위험을 대처하는데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아이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노인의 사회적 위험 대처에서 가족의 역할을 급속히 축소시키고 있으며, 반대로 노인의 수명 증가는 아이들에게 안정을 제공할 여지를 줄이고 있다. 교육은 노동시장에서 사용할 숙련과 역량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개인이 안정을 확보하게 돕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교육의 가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한편으로는 숙련의 주기가 짧아지면서 평생교육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교육의 가치가 줄어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더 많은 이들이 교육에 참여하면서 희소성이 떨어지는 효과도 있다. 현재 졸업장의 가치가 100이라고 할 때 자신의 19세였을 때 대학졸업장의 가치를 묻는 질문에 젊어질수록 그 가치가 낮다고 응답하고 있다(최영준 외, 2019a). 심지어 30대도 현재 가치보다 두 배 이상이라고 응답할 수준이니 그 가치의 하락이 매우 빠르다고 할 수 있다.

고용은 가장 중요한 안정의 원천이었으며, 여전히 그러하다. 하지만, 고용이 안정을 주는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 공공영역을 제외한다면 평생고용은 사라지고, 주된 일자리의 퇴직은 더 빨라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공영역이나 전문직으로 들어가기 위한 ‘경주’는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안정의 수단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개인들은 자신이 5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안정적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조사에서 국민들은 중산층의 기준을 월평균 소득 550만원에 평균 재산 9.8억원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최영준 외, 2019a). 이 역시 공적 안정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안정을 누리기 위한 기준이 높아지는 것이 반영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고용이 안정성의 핵심적 요소가 되기 때문에 개인은 고

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희생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현상이다. 앞서 언급된 장시간 근로나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산업재해 그리고 지위를 활용한 성희롱 등과 같은 사건들은 이를 잘 반영하는 모습들이다.

〈그림 4〉 본인 19세 때 대학졸업장 가치 (현재 가치=100)



그런 의미에서 자유안정성 모델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개인에게 안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고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안정성이 실질적 자유의 증진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안정성을 제공하는 고용으로부터의 상대적 자율성 확보와 가족으로부터의 상대적 자율성이 필요하다. Esping-Andersen과 유럽 학자들이 발전 시켜온 개념들을 빌리면 탈상품화와 탈가족화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자유안정성이 동시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탈상품화가 주어지게 되면 개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더욱 긍정적이 될 수 있다. 첫째, 안정을 주는 고용주로부터의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일터와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설계할 기반을 갖게 된다. 실제로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탈상품화 수준이 높은 국가들에서 개인들의 고용에 대한 헌신성(employment commitment)이 높다(van der Wel and Halvorsen, 2015; 김영미, 김은하, 2013). 즉, '돈 때문에 일을 하는 비중'이 낮고, 경제적 이유와 관계없이 자신이 원해서 일을 하는 이들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이다(최영준, 구교준, 윤성열, 2018). 둘째, 더욱 혁신적인 개인이 될 수 있다(Kim, Lee, Reynolds, 2012). 공적으로 부여된 안정은 개인이 위험을 회피하기보다는 위험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방식(risk taking)으로 삶을 전환시키게 되며, 이는 경제적 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실제 더 관대한 복지국가에서 혁신이 더 발견된다는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결과이다(최영준, 구교준, 윤성열, 2018). 마지막으로 개인에게 안정은 가족의 안정을 주고, 모든 아이들이 안정된 가운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 기회균등과 안정된 인적자본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준다(Mani et al., 2013). 마지막으로, 사회적 이동성에 기여할 수 있다. Bell et al.(2017)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기의 경제적 안정성은 성장한 이후 혁신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안정을 부여받게 되면서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거나 부모에 대한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면 어른들은 자신의 삶을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며, 자녀들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서 직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⁶⁾ 부모들은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이나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고 싶은 도전을 하지 못하는 현실은 타파될 필요가 있으며, 자유안정성은 바로 그 지점을 겨냥하며 문제의 사슬을 끊으려 하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추구하게 될 때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이 행복해지며, 지위 경쟁(positional competition)을 통해서 얻는 행복이 아닌 자아실현을 통해 얻는 행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동시에 행복은 혁신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자본을 생산하게 되고(Cohn & Fredrickson, 2009; Page, 2007), 기업가정신이 높아지고 혁신이 증가하게 되면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보편적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OECD(2018)의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8'을 보면 창업의 이유가 자신의 관심이나 열정이 동기라고 응답한 한국 국민들의 비중이 남 22%, 여 26%로 OECD에서 가장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 활동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자유안정성 모델의 출발점이 된다.

IV. 자유안정성은 어떻게 구현이 가능할 것인가?

1. 발전주의 모델과 사회민주주의 모델

자유안정성을 구현할 새로운 사회경제체제가 우리에게 필요할까? 먼저 현실에서 안

6) 그러한 점에서 Esping-Andersen(1999)가 논의한 바와 같이 탈가족화가 반가족화는 아니다. 오히려 의존성이 줄어 가족이 더욱 온전해질 수 있다.

정성을 구현했던 이상형들을 살펴보자. 아마도 제일 가까운 사례는 1980년대 초중산사회(middle mass society)를 성공적으로 구현한 일본과 스웨덴을 대표로 하는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발전주의 모델은 고용체제의 안정을 통해서 초중산사회 건설에 성공을 한 바 있다. 국가가 생산적인 수출주도형 기업뿐 아니라 지역의 건설업이나 농업과 같은 보호적 산업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하면서 이들이 피고용인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Steinmo, 2010). 그 결과 기업들이 전일제 평생고용을 하나의 고용문화로 채택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정된 피고용인들은 기업복지와 함께 사회보험의 혜택까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다. 1980년까지 일본의 낮은 불평등과 빈곤은 높은 복지지출에도 불구하고 불평등과 빈곤이 증가했던 서구와 차별적인 모습이었다. Murakami(1996)는 1980년대 일본의 발전을 보면서 북구유럽보다 더 성공적인 사회를 건설했음을 선언한 바 있다. 즉, 서구 국가들은 일단 개인이 불안정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안정/빈곤해지면 개입하여 이를 수정하는 형태이다. 하지만, 일본은 노동시장에 산업정책으로 직접 개입을 하면서 개인의 삶에 존엄성을 해치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구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Murakami(1996)의 지적은 일견 타당하다. 일본의 고용체제는 1차 분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모두가 안정된 고용을 가지게 하고 그것을 통해 안정성을 구현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우리 사회보다 이중화가 적고 노동시장에서 경쟁이 약하며 조기 퇴직 등으로 인한 문제나 노인빈곤 이슈가 적은 것도 이러한 체제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반면에 유럽 복지국가는 재분배, 즉 2차적 개입이며 노동시장 자체부터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시도와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일본의 초중산사회 모델은 21세기 한국의 모델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고용을 보장받았던 '모두'는 남성 가부장이었다. 젠더 불평등에 바탕을 둔, 여성은 광범위하게 배제된 모델이었다. 탈산업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 모델의 유용성은 더욱 도전을 받고 있다. 둘째, 고용을 통해 안정성을 부여했지만, 위계적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해당 모델 내 개인의 자유는 낮다. 국가는 기업을 보호하고, 정치인들이 지역기업들에 후견인이 되며, 기업은 남성가부장을 보호하고, 남성가부장은 가족을 보호하는 체제에서 안정은 고용과 가족을 통해 달성되며, 기업은 후견주의(clientelism)의 관계 속에서 공생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다. 개인의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공동체와 사회의 연대를 형성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없다. 셋째, 일본이 한국 사회에 비해서 가지는 장점들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나 낮은 사회와 국가에 대한 신뢰, 높은 정부부채와 지속가능성의 이슈 등 한국이 당면했거나 당면할 수 있는 여러 이슈들을 일

본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새로운 모델이 되기는 어렵다.

일본의 모델보다 더욱 유력한 대안은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Esping-Andersen, 1990) 혹은 사회민주주의 자본주의(Lane, 2019)이다.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은 유연안정성을 모델로 구현했을 뿐 아니라 행복도, 사회적 신뢰, 빈곤과 불평등, 고용에 대한 헌신성, 젠더평등, 혁신성 등 여러 지표에서 자유안정성이 추구하는 목표에 가장 가까운 사회를 만들어냈다(최영준, 2018). 실제로 Steinmo(2010)는 스웨덴 국가의 형성을 설명하면서 개인에 대해서 매우 사회적이면서도 동시에 국가와 기업은 자유적 모습을 지닌 사회적 자유(social liberal) 형태를 가졌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아누 파르타넨(Anu Partanen, 2016)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어릴 때부터 독립된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당연시 하는 사회이면서도 동시에 Rothstein(2002)이 관찰한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서로를 돕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가는 사회를 건설한 것이다. 이를 Rothstein(2002)은 조직화된 개인주의 혹은 연대화된(solidaristic) 개인주의라고 칭한 바 있다. 위에서 이데올로기로 내려와서 형성된 연대나 유대가 아닌 개인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형성된 공동체 의식은 다른 사회와의 핵심적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가장 개인주의화된 국가이지만 사회, 국가, 그리고 타인에 대한 신뢰수준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어떻게 사회민주주의 국가는 자유안정성을 거의 달성하는데 성공 했을까? 그것은 앞서서 언급한 자유안정성의 핵심적 목표인 탈상품화와 탈가족화 수준을 공적 개입을 통해서 최대한 높이고, 반면에 보편적이고 평등화된 조세 및 복지제도를 통해서 위계적 계층화를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보편적이고 다양한 교육기회와 훈련의 제공 등이 숙련과 혁신을 뒷받침하였다(Miettinen, 2013). 그런 점에서 사회민주주의 국가는 한국 복지국가를 비롯하여 많은 복지국가들의 역할 모델이 되기도 하였으며, 경제적 차원에서도 Economist(02/02/2013)에 의해서 ‘The Next Supermodel’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이후에 설명할 기본소득이 새로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사회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정책수단들은 여전히 유효함을 입증하고 있다(Lane, 2019).

그렇다면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저자는 가능성에 대한 희망과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우려가 되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성공은 포용적 노동시장과 안정적인 복지정치에 의해서 추동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강한 노동조합의 역할과 진보정당이 강력한 재분배 정치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안정된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사회보험제도와 보건사회서비스가 관대할 뿐 아니라 보편적으로 시행될 수 있었다. 보편적 사회보험제도는 능력에 따

큰 기여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기여를 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면서 사회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기여를 하였다⁷⁾.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은 스웨덴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노동시장의 불평등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보험은 노동과 연계되어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큰 규모의 사각지대가 존재할 경우 기여하는 이들과 기여하지 않고 받는 이들이 한 제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북유럽 국가들도 노동시장의 변화와 이중화와 함께 사회보험보다는 실업부조와 같이 공공부조에 기대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북유럽국가들이 여전히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장기실업률이 낮은 수준이지만,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장기실업자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 역시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실업부조를 도입할 것이라 공언하고 향후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8). 한편으로는 환영할만한 변화지만, 노동시장의 이중화 수준이 높고 근로임금 수준이 높지 않을 경우 선별적이고 안정적인 실업부조는 장기실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이미 다양한 연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고용의 형태와 일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향후 더욱 그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통적인 특수고용에 더하여 우버와 같은 호출형 플랫폼 노동자들, 그리고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Amazon Mechanical Turk)와 같은 클라우드 워크형 플랫폼 노동자들 역시 증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최영준, 최정은, 유정민, 2018). 이미 이들의 노동자성과 고용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적/학술적 논의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회보장제도를 위협하는 논의가 될 가능성 역시 높다. 그러한 점에서 사회민주주의가 한국의 자유안정성을 위한 효과적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이후 논의할 기본소득제도만큼 쉽지 않은 과정을 겪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

2. 기본소득이 대안인가?

기본소득은 일본의 발전주의나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명료하다. 모두에게 조건에 관계없이 생활을 하기에 안정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기본소득은 자유안정성이라

7) 한국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원의 장지연박사가 관련하여 많은 논의를 전개한 바 있다.

는 관점에서 가장 이상적이다. 일단 모두에게 안정성을 충분히 제공하기 때문이다. 안정성을 개인에게 주게 된다면 기본소득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인들은 실질적 자유를 누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van Parijs, 1995). 유급노동 뿐 아니라 다양한 일(work)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며, 탈상품화와 탈가족화의 관점에서도 개인의 자유는 높아진다. 유연안정성과 달리 고용주 뿐 아니라 모두에게 유연함을 제공하며, 젠더친화적이기도 하다.

기본소득은 하나의 제도로 이해하기보다는 발전국가나 복지국가와 같이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국가모델로 이해하는 것이 적당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본소득은 단순히 복지정책을 넘어 일하는 이들에게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고용/노동정책 측면도 있고, 재원의 차원에서 보면 조세정책의 혁신적 변화를 요구한다(Standing, 2017). 나아가 정치적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생산체제, 복지체제, 그리고 정치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관점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이 국가 운용 모델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체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즉, 싱가포르, 타이완,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이 다르고, 그리고 자유주의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가 다르듯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들도 상당한 변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완전한 기본소득이 실현이 되기 이전에 기본소득의 형태는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부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나 ‘기본소득들’이라 칭한 윌홍식(2018)의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그 시초부터 지금까지 우파에 의해서 주장되어 오기도 하였고, 좌파적 혹은 진보의 입장에서 주장되어 오기도 하였다. 우파 기본소득 논의는 최초로 Milton Friedman의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서 비롯된다. 부의 소득세는 빈곤선을 설정하고 빈곤선 이상의 시민들에게 조세를 거둬 빈곤선 이하의 시민들에게 이전하는 것이다(Friedman, 2009; Tondani, 2009). 또한 Murray(2008)와 같이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합하여 기본소득으로 제공하자는 주장이나 이것이 결과적으로 임금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우파적 입장이 있다(Fitzpatrick, 1999). 이에 비해서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서 출발하여 기본소득이 주는 개인의 자유와 해방적 역할에 주목하는 입장도 존재한다(Standing, 2011). 한국에서도 서상목과 같이 모든 사회보장제도를 통합하여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자는 입장⁸⁾부터 강남훈(2011)이나 김교성

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07/2019020702840.html (이런저런 복지를 없애고, 모두에게 기본소득 50만원씩 준다면...., 조선일보 2019/02/08, 2019년 3월 30일 접속).

의(2018)이 주장하는 보다 확장되고 기존 복지국가와 함께하는 모델을 제안하는 입장이 있다. Haagh(2011) 역시 기본소득과 사회민주주의를 대립적 관계로 보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주장하며, 두 체제가 상보성을 가질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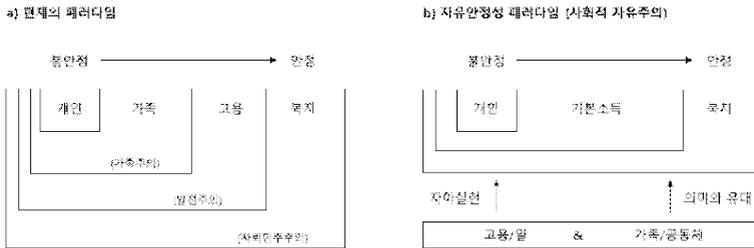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자유안정성 원리에 부합하는 이상적 기본소득 체제의 형태를 밝힐 필요가 있다. 첫째, 기본소득이 개인 단위로 모든 시민에게 빈곤선 이상을 제공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은 최소한 1인 가구 생계급여액인 50만원 수준(2019년 50만 1,632원)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장애와 같은 특수한 욕구에 대한 급여를 제외한 공공부조와 유사 자산조사 급여는 사라질 것이다. 최소 빈곤선이 중요한 이유는 자산조사 등의 조건부 급여와 관료적 제도에서 개인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의 사회보험제도는 그 비례성이 완화된 형태로 그리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담보된 형태로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셋째, 보건이나 핵심적 사회서비스는 여전히 공공의 책임성 하에 운영된다. 다만, 공공의 책임성이 전면적 무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부분은 더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 넷째, 일의 선택과 고용은 가능한 자유로운 선택과 다양한 형태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이 실시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는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본소득이 도입된 체제는 앞선 두 체제와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개인이 가족에 의해서만 안정성을 부여받는 사회를 가족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발전주의 체제는 가족과 함께 고용을 핵심적인 안정의 메커니즘으로 사용한다.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복지로 채우는 역할을 한다. 사회민주주의에서는 가족보다는 고용과 함께 관대한 복지를 안정의 메커니즘으로 활용을 한다. 발전주의가 1차 노동시장 개입, 사회민주주의가 고용을 촉진하는 사회정책과 함께 2차 재분배 개입을 핵심으로 한다면, 기본소득이 이상적으로 주어지는 자유안정성 체제에서는 0층에 기본소득을 통해 고용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안정이 부여된다. 이후 고용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이 주어질 것이며, 복지를 통해서 개별화된 욕구나 사회적 위험을 대처하게 된다.

앞서 한국의 사례를 통해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일부 국가들과 일부 중산층 이상을 제외하면 여전히 가족과 고용이 자아실현과 연대의 수단보다는 안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서 자유안정성 패러다임 사회에서는 개인이 안정성을 부여받게 되면 고용이나 일을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삼고, 가족은 삶의 의미를 찾고 연대 및 유대를 체험하는 수단이 되게 된다. 이미 사회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많은 이들이 고용과 가족이 안정을 확보하는 수단을 넘어서 자아실현이나 연대나 삶의 의미를 찾는

도구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결과적인 모습은 유사하지만, 고용 이후의 개입이 아닌 고용 이전의 개입이라는 차원에서 사회민주주의 패러다임과 기본소득의 패러다임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그림 5〉 기본소득에 따른 자유안정성 패러다임의 변화



하지만, 이러한 이상형에 가까운 기본소득 체제가 일순간의 정치적 선택으로 갑자기 도래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인공지능과 기술혁명이 다 진행된 후에 고려해보자는 사후적 태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최영준, 최정은, 유정민, 2018). 이미 혁명은 진행중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 논의는 어떠한 이상형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보다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러한 체제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소득 프로젝트는 두 가지 차원에서 장기적 프로젝트이며 동시에 정치적 프로젝트일 수밖에 없다. 우선, 기본소득은 현재 존재하는 사회적 위험을 당장 대처해야 한다. 양재진(2018)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의 빈곤 이슈나 실업으로 당면한 사회적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모든 자원을 미래 기본소득형 투자에 사용하자고 하기는 어렵다. 추가적 재원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당면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면서 동시에 미래적 시각에서 정책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소득 체제는 단기간 내에 실현하기 어렵다.

또한, 인플레이션이나 스테그플레이션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 학자들은 기존 공적지출의 재구조화나 증세 등을 통해서 재정중립적 기본소득을 만들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다(Tcherneva, 2013; Standing, 2017; 이승운, 백승호, 2018; 유중성, 2018). 결국 기존 제도의 재구조화나 증세는 모두 정치적 과정을 필요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어떠한 기본소득 체제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낮은 기본소득이 많은 사회보장을 대체하는 체제가 될 수도 있으며, 보다 이상적인 체제가 될 수도 있다. De Wispelaere(2016)이 지적한 바와 같이 낮은 정치적 지지나 구체적 기본소득 모델에

대한 합의의 부재는 기본소득 아젠더부터 실제 구현되는 사이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어떠한 경로가 선택될 것인지는 누군가의 합리적 판단에 기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그 사회의 권력(power)과 주류적 논의에 따라서 결정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영준, 최정은, 유정민(2018)이 지적한 바와 같이 충분한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급여 수준 달성은 정치에 달려있으며, 그러한 정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 기본소득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낮은 급여 수준으로라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며 추후에 급여 수준을 올리자는 주장은 자칫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것으로는 현재 존재하는 어떠한 이슈도 풀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당장 필요한 곳에 사용될 자원을 가져오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급여상승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교성 외(2018)에서도 이상적 이행경로로서 현 사회보장 체계에 대한 합리적 조정 이후 실업부조와 같은 사회부조의 도입, 그 이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수당 구축, 청년을 위한 사회수당 도입, 참여소득의 일환으로 농민수당 도입, 마지막으로 각종 수당을 기반으로 기본소득을 운영 및 급여수준 상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현 사회보장 체계의 합리적 조정과 실업부조 등을 다 마친 후에 사회수당을 도입하기 시작할 만큼 시간이 여유로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윤홍식(2018)은 부분 기본소득으로서 보편적 사회수당 제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빈곤을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함과 동시에 사회수당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현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이 공존하는 방식으로 전환기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현실의 검증되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자유안정성을 구현할 유효한 대안인지는 여전히 질문으로 남아있다. 새로운 사회경제체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앞서 언급한 증세나 기존 제도의 재구조화 등을 위해서 사회적이고 정치적 숙의가 중요하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해소하고, 자유안정성을 구현할 대안임을 검증하기 위해 우리는 숙의와 함께 실험을 제안한다. 민주적 거버넌스와 증거기반정책은 새로운 정책을 고안하고 개혁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축을 형성한다(최영준, 전미선, 2017). 민주적 거버넌스의 핵심적 도구는 숙의 절차이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며 어떠한 대안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학습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실증적 증거가 없다면 가정에 기반한 숙의 이상으로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정책실험이 필요로 한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정책 실험은 완벽한 결과를 내기 어렵고, 동시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실증적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

이를 가진다. 실험은 또 다른 속의 과정을 촉발할 수 있으며, 더 깊은 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기본소득 체제가 쉽게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시도를 못할 것은 아니다.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의 고리가 명확하다면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삶의 유동성에 따른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줄이면서 개인에게 자유롭고 안정된 삶이 문제 사슬을 끊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유연안정성도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유연안정성의 부작용들을 우리가 인지한 이상 자유안정성이 반드시 유연안정성을 거쳐서 이루어질 필요도 없다.

V. 청년 기본소득 실험 제안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수당의 일종이자 전환기적 부분기본소득으로서 청년기본소득을 제안하며, 동시에 실험을 제안한다. 기존 제도들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어떠한 변화들이 수반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미 기초연금이 시행되고 확장되는 가운데 있고, 아동수당 역시 보편적으로 도입된 바 있다. 이들 역시 기본소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두 수당은 여전히 비경제활동인구에게 제공되는 급여라는 차원에서 기존 복지국가의 패러다임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역시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 기초연금의 경우 지속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동수당 역시 점차적 증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동수당이 아동과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기보다는 아동이 노동시장 지위경쟁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해서 청년소득은 근로가능 연령대에게 보편적 수당을 준다는 측면에서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보다 더욱 기본소득에 가까운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근로가능 연령대 중에서 청년부터 부분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까? 자유안정성이 필요한 이유와 자유안정성이 주는 사회적 혜택을 살펴보자.

청년 시기는 아동과 노인을 제외하면 가장 불안정한 시기이다. 김문길 외(2017)의 연구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인 청년 빈곤율은 7%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수치는 30대 초반이 되면 3.4%로 떨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많은 수의 빈곤청년들이 탈가족을 하지 못하고 부모와 동거하면서 그들의 경제적 상황이 가려진 측면이 있다. 실제 독립된 청년 1인가구의 경우 빈곤율이 21%가 넘으며, 부모와 동거할 경우 3.5%로 줄어든다. 또한,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결과를 통해 보면 20

대 초반의 경우 거의 65%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매우 자주 혹은 자주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20대 후반 역시 30%가 넘으며, 가끔이라고 응답한 이들 역시 33%에 이른다(최영준 외, 2019b). 자유안정성의 관점에서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이 중요하다고 판단할 때, 그리고 점차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고려할 때 청년 빈곤 이슈는 잠재적 영역까지 함께 추측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청년이 안정을 획득하여 독립하게 되면 그들 부모세대인 50대-60대에게도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동시에 청년들은 현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영준 외(2019b) 연구에서 한국재정패널 10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보험 가입률이 20대 초반이 13%, 20대 후반이 40% 정도였다. 실업급여 수급을 경험한 이들은 전국에서 1.5%에 지나지 않았다. 즉, 20대는 자신의 직업과 미래를 탐색하는 시기이지만, 가족에 의존하지 않으면 경제적 안정을 보장받기 어려워 충분한 탐색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청년의 불안정성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청년은 자신의 개인적 경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동시에 혁신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Bell et al., 2017; 구교준 외, 2018b). 청년의 기업가정신과 혁신활동은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경제를 변화시키는 데에도 중요하며, 동시에 대부분의 고용이 낮은 생산성을 가진 중소기업에 몰려있는 한국경제에서 더욱 중요성을 가진다. 또한, 기술발전과 이에 따른 거래비용의 감소는 성공적 혁신 창업가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Henrekson, 2005). 동시에 직업의 양극화를 설명하는 Goos, Manning, & Salomons(2014)의 연구를 통해서 반복적 일자리가 아닌 창의적 일자리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그들의 "Routine-based technological change" 설명에 따르면 반복적 작업이 많은 중간소득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많으며, 중간층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노동시장이 이중적으로 구조화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혁신과 창업에 대해서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선, 20년 정도를 쉬 없이 공부하여 최고의 인적자본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고용을 통한 안정을 찾아가려는 경쟁에 매몰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2017년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13-29세까지 청소년/청년들의 선호는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에 있었다. 특히, 대학생들 이상이 선호하는 직장은 공기업과 국가기관이 1-2위를 차지하면서 약 50%가 되고 그 이후 대기업이 15%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중고등학생들 역시 국가기관에서 일하고 싶다는 비중이 제일 높다. 국가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창업을 하겠다는 청년은 약 3%에

지나지 않는다. 전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창업 관련 비교 연구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ssociation (2017)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청년 창업율은 조사 대상 60개국 중 59위(18세-24세)와 58위(25세-34세)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되었다(구교준 외, 2018b). 치열한 혁신경쟁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표 2〉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 (13-2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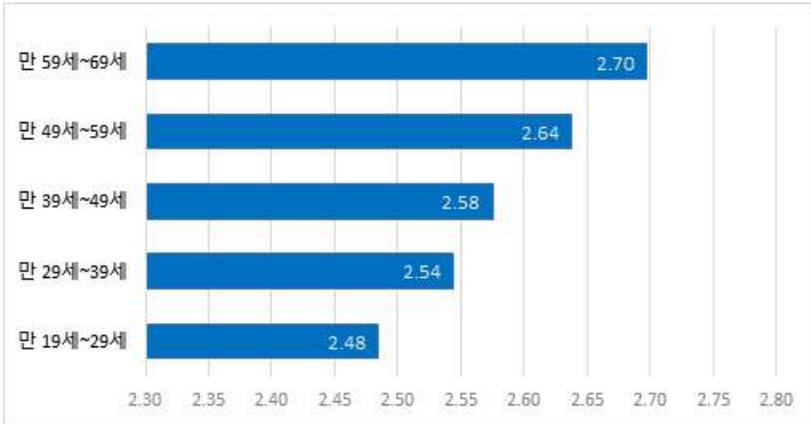
(단위: %)

	계	국가 기관	공기업 (공사·공단)	대기업	벤처 기업	외국계 기업	전문직 기업	중소 기업	해외 기업	자영업 (창업)	기타
15년	100.0	23.7	19.5	18.7	3.1	6.7	8.6	3.0	3.6	11.5	1.7
17년	100.0	25.4	19.9	15.1	2.9	7.3	8.2	3.7	4.5	11.3	1.7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 (2017.11.6.)

앞서 미래 기술혁명 시대에 창의적이고 비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직업을 유지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World Value Survey에 따르면 한국 일자리의 업무성격은 창의성과는 거리가 멀다(최영준, 구교준, 윤성열, 2018). 자신이 창의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밝히는 이들의 비중이나 지시를 받고 하는 일이 아닌 독립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한다고 밝힌 비중 모두 한국이 스페인과 함께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창조적 업무를 한다는 이들의 비중은 30%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LAB2050에서 2018년 10월에 조사한 설문에서 나는 창의적이라는 질문에 동의하는 수준이 20대에서 가장 낮았다. 60대가 2.7인데 반해서 20대가 4점 만점에 2.5 정도로 제일 낮았다. 인지적 차원의 질문이기 때문에 실제 창의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있지만,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무언가를 풀어 내면서 학습을 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사교육 속에서 만들어진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익숙한 청년들의 경험에서 기인했을 수도 있다.

〈그림 6〉 연령별 ‘나는 창의적이다’에 동의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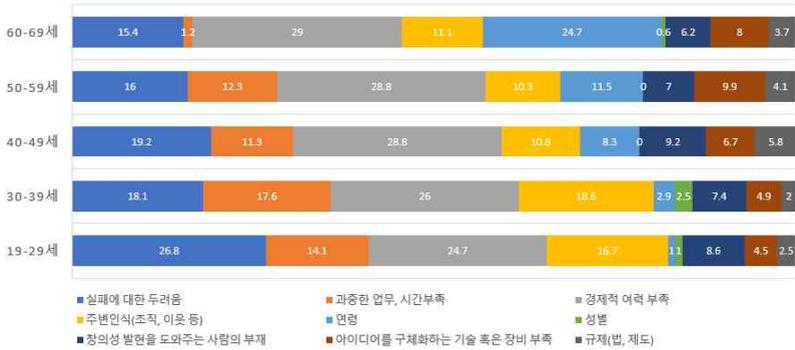


주: 1)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매우 동의함(4점)' 리커트척도의 평균값임.

같은 설문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를 물었을 때 '경제적 여력 부족(27.5%)이 압도적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19.1%), 주변 인식(13.4%), 과중한 업무 및 시간 부족(11.7%)' 순으로 나타났다. 60대가 '경제적 여력 부족'을 가장 높은 비율(29%)로 응답한 데 또한 바로 뒤를 이은 응답인 '연령(24.7%)'의 경우, 해당 항목의 전체 평균(9.2%)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이에 반해서 20대의 경우, 26.8%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꼽아 전 연령 중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전체평균 19.1%), 이는 해당 연령에서의 '경제적 여력'(24.7%)을 뽑은 비율보다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혁신과 창업은 '실패의 무덤' 위에 생산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경제적 여력 부족과 함께 청년층에게 현재 혁신의 장벽이 되고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도 새로운 안정성 도구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림 7〉 연령별 창의성 발휘에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

(단위: %)



불안정한 삶은 경제적 지속가능성 뿐 아니라 사회적 지속가능성에서도 문제를 노출한다. 하나의 증거는 젠더갈등이다. 20대 남성 중 65%가 남성이 차별을 받고 있으며, 여성이 차별받는다는 의견은 34%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⁹⁾. 이에 비해서 여성들은 90% 이상이 여성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고, 남성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36%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동시에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 흥미로운 결과이다. 젠더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은 현재 대학에서나 다양한 남녀 간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젠더갈등은 사회적 자본을 넓히고 협업을 하는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비연대적이고 고립적 개인주의로 왜곡되어 나타나고 있다. 다른 젠더 형제자매와 함께 자라지 않은 ‘외동’이 많아지는 것도 원인일겠지만, 앞서 설명한 노동시장에서 안정을 차지하기 위한 지위경쟁에서 젠더에 따른 혜택의 차이가 이러한 갈등의 단초가 되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다른 하나의 증거는 가족형성과 사회적 재생산에 대한 것이다. 안정성이 부여되지 않고 젠더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까지를 고려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 LAB2050의 설문에 따르면 ‘N포 세대’라고 칭해지는 청년들도 저출산이 풀어야 할 사회문제라는 데에는 70% 이상이 동의를 하고 있다(최영준 외, 2019a). 하지만 저출산이 사회문제라고 응답한 298명 중 정부가 출산을 강요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이 239명으로 80%를 넘었으며,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거의 60%가 저출산이 사회문제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정부가 출산을 강요한다고 동시에 응답하였다. 같은 설문에서 실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아이가 있어

9)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각각 물었음.

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청년들에게 물었다. 다음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대 초반이나 후반 모두 ‘결혼은 해야 한다’나 ‘아이는 있어야 한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60% 이상이 부정적이며, 20대 후반에서 부정적 응답이 다소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여성은 부정적 응답이 70%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저출산 이슈가 향후에도 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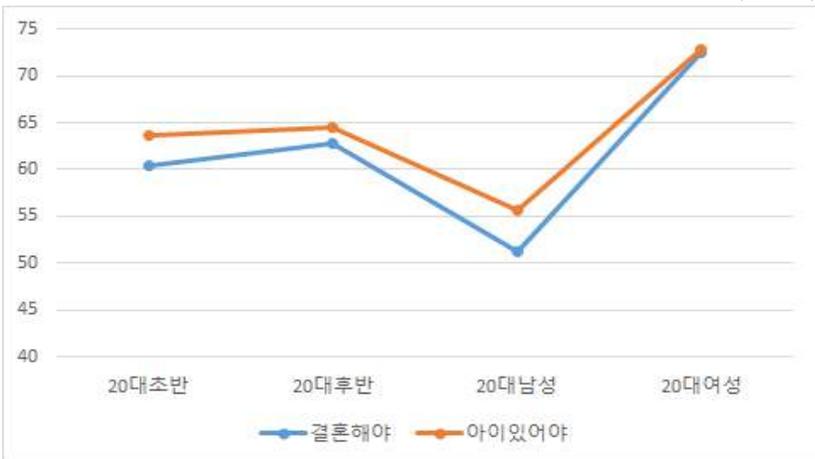
〈그림 8〉 청년의 성별 남녀차별 인식

(단위: %)



〈그림 9〉 결혼과 아이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단위: %)



이것이 저출산고령화 이슈를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적 사회경제체제를 이루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청년은 향후 30-40년을 좌우할 수 있는 계층이다. 하지만, 본 바와 같이 청년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직면해 있고, 안정을 향한 갈구, 그리고 반복적 일자리와 종속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와 함께 젠더갈등 등 사회적 연대의식이나 사회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시에 불안정성이 가족 형성이나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고 있다. 현재의 부정적인 모습들은 앞서 제시한 문제 사슬의 결과일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써 청년에게 직접적인 안정을 제공하면서 안정이 어떻게 이들에게 자유를 부여할 것인지, 또한 이들에게 주어진 자유안정성이 이들의 일이나 사회적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해보자는 것이다.

VI. 결론을 대신하여: 실험을 제안하는 이유

본 글에서는 한국의 문제의 사슬에서부터 시작하여, 어떠한 새로운 대안적 원칙이 필요한지를 논의하고, 이어 기본소득의 가능성과 마지막으로 청년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번영시켜왔던 여러 요인들은 이제 향후 발전을 가로막은 장막이 되어가고 있다. 개인은 행복하지 않고, 개인의 문제점들은 사회의 구조적 이슈가 되어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경제구조를 변화시키는 방향식 접근도 가능하겠지만, 여기에서는 개인에게 자유안정성을 주어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구조적 이슈를 풀어가는 상향식 접근을 제안하였다. 안정성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가족이나 고용 그리고 교육이 모두 한계에 부딪히면서 새로운 도구로 국가로부터의 안정성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사회민주주의 모델도 역시 유효하지만, 한국적 맥락에서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을뿐더러 사회민주주의 모델이 당면한 문제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시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청년 기본소득을 제안하면서 청년을 통한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구상하자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청년 기본소득의 전면적 시행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청년 기본소득의 실험을 제안한다. 실험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기본소득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더욱 확실하고 세밀한 증거가 필요하다. 기존 해외에서의 실험이 존재하지만, 해외 실험의 대상과 한국의 실험의 대상이 다르고, 동시에 해외의 제도적 맥락과 한국의 제도적 맥락은 매우 다르다. 이론적이고 파편화된 증거만으로 청년 기본소득이 원하는 성과를 낼 것이라고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한 점에서

정밀하고 구체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효과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효과성이 입증된다고 해도 도입 초기에는 예산의 제약으로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도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험을 통한 증거는 청년기본소득이 어떻게 출발하여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셋째, 실험은 동시에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사회적 숙의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미 청년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뉴스기사들이 2019년 1~2월에 제시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는 동시에 향후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내다보며 어떠한 사회경제체제를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숙의과정이 이 실험이 기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사회경제체제의 대안으로 전면적 기본소득이 향후 논의될 때에 도입방안 및 로드맵에 대한 다양한 증거와 아이디어를 이 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청년이 당면한 이슈들은 한국사회의 모든 모순의 집약이자 미래사회의 거울이다. 다양한 이들이 한국의 현재 상황을 총체적 위기나 난국으로 표현하곤 하며 전혀 새로운 정책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종종 한다. 하지만, 막상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현실성’이라는 이유로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른 방안을 시도해보지 않고 현재의 문제들을 돌파하며 더 나은 사회를 기대할 수 없다. 청년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지만, 변화를 추동하는 중요한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새로운 자유안정성 실험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시작해보자.

■ 참고문헌

- 강남훈. 2011. “한국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재분배효과 비교”. 《마르크스주의 연구》, 8(3), 76-98.
- 고용노동부. 2018. “2019년 업무보고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 세종 <http://www.korea.kr/special/2019briefing.do?newsPkgId=49500720&cardnewsPkgId=49500719&infoPkgId=49500722&moviePkgId=49500721#1st>
- 구교준·최영준·이관후·이원재. 2018a. 《자유안정성 혁명: 행복하고, 혁신적인 대한민국을 위한 제안. LAB2050 솔루션 페이퍼》. LAB2050.
- 구교준·반가운·정이운·최현수·장한일·최정호. 2018b. 《기본소득으로서 청년수당 효과성 측정을 위한 정책실험 설계 연구》. 서울연구원. LAB2050.
- 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 2018. 《기본소득이 온다》. 사회평론아카데미. 서울

- 김문길·김태완·임완섭·정은희·김재호·안주영·김성아·이주미·정희선·최준영. 2017.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 분석과 정책대응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
- 김수현·최연희. 2007. "신체적 건강상태가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7(4), 775-788.
- 김영미·김은하. 2013. "복지국가와 일에 대한 태도: 노동시장 제도와 일 몰입의 관계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보장연구>, 29(3), 81-112.
- 김희삼. 2015.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KDI Focus>, (54), 1-8.
- 나카마사 마사키. 2017.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을 읽어주는 시간>. Arte.
- 노민선. 2018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국제비교 및 시사점". <임금정보 브리프>. 2018년 제9호. 한국노동연구원.
- 백승호·이승윤. 2018. "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 <한국사회정책>, 25(3), 37-71.
- 양재진. 2018.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인가?". <한국사회정책>, 25(1), 45-70.
- 유종성. 2018.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재분배효과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정책>, 25(3), 3-35.
- 윤홍식. 2018.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틀"을 위해". <월간 복지동향>, (239), 44-55.
- 이다미. 2017. "한국 노동시장의 젠더불평등과 성별 연금격차". <비판사회정책>, (57), 231-271.
- 이항우. 2015. "자유/무료 노동의 화폐적 보상: 소액 결제 혹은 보편적 기본소득". <경제와 사회>, (107), 323-351.
- 인디고연구소. 2014. <희망, 살아있는 자의 의무. 지그문트 바우만 인터뷰>. 궁리.
- 장하성. 2014. <한국 자본주의>. 헤이복스.
- 전병유. 2016. "유연안정성 담론과 전략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산업노동연구>, 22(1), 1-35.
- 최영준. 2018. "한국 복지국가의 새로운 DNA". <한국사회정책>, 25(4), 39-67.
- 최영준·이승준. 2015. "중고령층의 자영업 경험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22(1), 381-402.
- 최영준·윤성열. 2017. "새 정부의 노동·복지 정책: 이상과 현실". <한국정책학회 동계 학술발표논문집>, 2017, 63-89.
- 최영준·전미선. 2017. "공공정책에서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 <한국행정학보>, 51(3), 359-387.

- 최영준·구교준·윤성열. 2018. “복지국가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보장연구》, 34(4), 229-258.
- 최영준·최정은·유정민. 2018. “기술혁명과 미래 복지국가 개혁의 논점”. 《한국사회정책》, 25(1), 3-43.
- 최영준·김도균·최정은·윤성열·유정민. 2019a. 자유와 안정 대국민 서베이 결과. LAB2050.
- 최영준·구교준·배종훈·정이윤·이승주·박일주. 2019b. 청년 기본소득 실험 설계안. LAB2050.
- 최태욱. 2011. “진보적 자유주의의 진보성과 실천력에 대하여”. 최태욱 편집, 《자유주의는 진보적일 수 있는가》 (pp. 6-27). 서울: 폴리테이아.
- 《통계청》, 2017. “2017년 사회조사 결과(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bmode=read&bSeq=&aSeq=364361&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 《통계청》, 2018. “2018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보도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3/index.board?bmode=read&bSeq=&aSeq=369032&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 《통계청》, 2019.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7/1/index.board?bmode=read&aSeq=373552
- Akçomak, I. S., Ter Weel, B. 2009. “Social capital, innovation and growth: Evidence from Europe”. *European Economic Review*, 53(5), 544-567.
- Anderson, C. J., & Hecht, J. D. 2015. “Happiness and the Welfare State: Decommodification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Subjective Well-Being”. in Beramendi, P., Häusermann, S., Kitschelt, H., & Kriesi, H. (Eds.). *The Politics of Advanced Capitalism* (pp. 357-38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nnai, A., & Tamakoshi, A. 2014. “The association between long working hours and health: a systematic review of epidemiological evidence”. *Scandinavian journal of work, environment & health*, 40(1), 5-18.
- Bell, A. M., Chetty, R., Jaravel, X., Petkova, N., & Van Reenen, J. 2017. “Who Becomes an Inventor in America? The Importance of Exposure to Innovatio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Bredgaard, T., & Madsen, P. K. 2018. "Farewell flexicurity? Danish flexicurity and the crisis". Transfer: *European Review of Labour and Research*, 24(4), 375-386.
- Cohn, M. A., Fredrickson, B. L., Brown, S. L., Mikels, J. A., & Conway, A. M. 2009. "Happiness unpacked: positive emotions increase life satisfaction by building resilience". *Emotion*, 9(3), 361.
- Conwell, Y., Duberstein, P. R., Hirsch, J. K., Conner, K. R., Eberly, S., & Caine, E. D. 2010. "Health status and suicide in the second half of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A journal of the psychiatry of late life and allied sciences*, 25(4), 371-379.
- De Wispelaere, J. 2016. "The Struggle for Strategy: On the Politics of the Basic Income Proposal". *Politics*, 36(2), 131-141.
- Dewey, J. 1991. *Liberalism and Social Action*. Illinois: Southern Illinois Univ. Press.
- 김진희(역). 2011. 《자유주의와 사회적 실천》. 책세상.
- 《Economist》. 2013. "Lessons: The secret of their success. The Nordic countries are probably the best-governed in the world", 2013(February 2), from <https://www.economist.com/special-report/2013/02/02/the-secret-of-their-success>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John Wiley & Sons.
- Filippetti, A., & Guy, F. 2015. "Skills and social insurance: Evidence from the relative persistence of innovation during the financial crisis in Europe". *Science and Public Policy*, 43(4), 505-517.
- Fitzpatrick, T. 1999, *Freedom and Security*, Palgrave Macmillan.
- Frericks, P. and Maier R. (2008) "The gender pension gap: effects of norms and reform policies". In Kohli, M. and Arza, C.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Pensions: Politics, Policy Models and Outcomes in Europe*, (pp. 175-195). London: Routledge.
- Friedman, M. 2009. *Capitalism and freedo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inn, J., & Arber, S. 1996. "Patterns of Employment, Gender and Pensions: The Effect of Work History on Older Women's Non-State Pensions". *Work, Employment and Society*, 10(3), 469-490.

-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ssociation. 2017.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6/17 Global Report*. Retrieved April, 2, 2017.
- Goos, M., Manning, A., & Salomons, A. 2014. "Explaining job polarization: Routine-biased technological change and offshoring". *American Economic Review*, 104(8), 2509-26.
- Haagh, L. (2011). "Basic income, social democracy and control over time". *Policy & Politics*, 39(1), 43-66.
- Henrekson, M. 2005. "Entrepreneurship: a weak link in the welfare state?".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14(3), 437-467.
- Hombert, J., Schoar, A., Sraer, D., & Thesmar, D. 2014. "Can unemployment insurance spur entrepreneurial activity?".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Isabelle J., Pisu, M. and Bloch, D. 2012, "Tackling income inequality: The role of taxes and transfers", *OECD Journal: Economic Studies*, Vol. 2012/1.
- Kääriäinen, J., & Lehtonen, H. 2006. "The variety of social capital in welfare state regimes—a comparative study of 21 countries". *European Societies*, 8(1), 27-57.
- Kim, P. H., Lee, C. S., & Reynolds, P. D. 2012. "Backed by the state: Social protection and starting businesses in knowledge-intensive industries". In *Entrepreneurial Action* (pp. 25-62).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 Lane, K. 2019, *Social Democratic Capit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Forthcoming.
- Mani, A., Mullainathan, S., Shafir, E., & Zhao, J. 2013. "Poverty impedes cognitive function". *science*, 341(6149), 976-980.
- Miettinen, R. 2013. *Innovation, human capabilities, and democracy: Towards an enabling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 Muffels, R., Wilthagen, T. 2013. "Flexicurity: A New Paradigm for the Analysis of Labor Markets and Policies Challenging the Trade-Off Between Flexibility and Security". *Sociology Compass*, 7(2), 111-122.
- Murakami, Y. 1996. *An Anti-Classical Political-Economic Analysis: A Vision for the Next Century*,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Murray, C. 2008. "Guaranteed Income as a Replacement for the Welfare State", *Basic Income Studies*, Vol. 3, No. 2. 1-12.

- OECD. 2016. *Society at a glance*.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17a. *Health at a glance*.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17b.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18.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Highlights 2018*. OECD. <http://www.oecd.org/sdd/business-stats/EAG-2018-Highlights.pdf>
- «OECD». 2019. OECD Statistics. OECD. <https://stats.oecd.org/> (2019년 3월 30일)
- Page, S. E. 2007. "Making the difference: Applying a logic of diversity".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21(4), 6-20
- Partanen, A. 2016. *The Nordic theory of everything*. Gerald Duckworth & Co. 노태복(역). 2011. *우리는 미래에 조금 먼저 도착했습니다*. 윈더박스.
- Rothstein, B. 2001. "Social capital in 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Politics & Society*. 29(2). 207-241.
- Rothstein, B. 2010. "Happiness and the welfare state". *Social Research: An International Quarterly*, 77(2), 441-468.
- Ryan, R. M., & Deci, E. L. 2001.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141-166.
- Sparks, K., Cooper, C., Fried, Y., & Shirom, A. 1997. "The effects of hours of work on health: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70(4), 391-408.
- Standing, G. 2011. *The precariat: The dangerous new class*. Bloomsbury Academic.
- Standing, G. 2017. *Basic income: and how we can make it happen*. Penguin UK. 안효상(역). 2018. *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비.
- Steinmo, S. 2010. *The evolution of modern states: Swed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cherneva, P. R. 2013. "The job guarantee: delivering the benefits that basic income only promises—a response to guy standing". *Basic Income Studies*, 7(2), 66-87.
- Tondani, D. 2009. "Universal basic income and negative income tax: Two different ways of thinking redistribution".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8(2), 246-255.
- van der Wel, K. A., & Halvorsen, K. 2015. "The bigger the worse? A comparative study

of the welfare state and employment commitment”. *Work, employment and society*, 29(1), 99-118.

Viebrock, E., & Clasen, J. 2009. “Flexicurity and welfare reform: a review”. *Socio-Economic Review*, 7(2), 305-331.

Warnecke, T. L., & DeRuyter, A. 2009. “Paternalism and development: expanding the analysis of welfare regimes in Southern Europe and Asia”. In Association for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special international conference, *Asian Social Protec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Singapore.

Wilthagen, T. 1998. “Flexicurity: A new paradigm for labour market policy reform?”. *WZB Discussion Paper*, No. FS I 98-202. Wissenschaftszentrum Berlin für Sozialforschung (WZB), Berlin.

«World Bank». 2019.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 (2019년 3월 25일 접속)

Proposing a Basic Income Experiment for ‘Freecurity’: Towards a New Socio-Economic Regime

Young Jun Choi & Sungryul Yun

The level of happiness is low whereas the level of insecurity is high in South Korea. Behind the scene, there is a complicated but tightly interwoven socio-economic structure where individuals have to fiercely compete in the dualized labor market to obtain security. While much has been proposed to untangle the knots, less attention has been paid to a solution directly concerning individuals’ insecurity. Instead of macro-economic or political solutions, this research introduced the principle of freecurity, combination of freedom and security. In particular, as employment and family are rapidly losing their function of providing security, this study argues that the state should be a new entity guaranteeing individuals’ security universally and unconditionally, to enable individuals to independently pursue self-realization. This study also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basic income as a tool for realizing freecurity in society. Instead of introducing a full basic income in the near future, it proposed a youth basic income experiment for investigating the effectiveness and feasibility of basic income. A youth basic income could enhance the level of welfare and happiness for young people, which subsequently increases the economic and social sustainability of Korean society.

※ Keywords: Security, Freedom, Freecurity, Basic Income, Policy Experiment